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9. 6.(수) 12:00

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,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

- 지자체별 각기 다른 참전수당 기준에 따른 격차 해소와 보훈예우 개선 방안 논의
- 9월 7일(목) 15시, 「제43차 정책소통포럼」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

- 70대 ㄱ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지자체에서 참전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동기와 같이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.
- 60대 ㄴ씨는 우리 지역은 80세 이상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, 지원 금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급연령 하향과 지급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.
- 지자체 보훈담당자 ㄷ씨는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할 때 사회보장심의를 받는 것처럼 정부-지자체 간 협의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고, 보편적인 수당 지급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

□ 지난 6월,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호국영웅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.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국가보훈부와 **“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? (지자체 참전수당 중심으로)”** 라는 주제로 **9월 7일(목) 오후 2시,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**에서 **‘제43차 정책소통포럼’** 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정부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, 발전을 위해 공헌·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모시고,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상, 복지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오고 있다.

○ 지자체에서도 보훈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 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,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.

○ 올해 7월 기준, 시군구 평균 지급액은 18만 3천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고, 지역별 여건에 따라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46만 원까지 상이하게 참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.

□ 이번 포럼은 지역별 참전수당 격차와 보훈제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, 유공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.

○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, 유튜브 '정책소통포럼' 채널(www.youtube.com@onsotong24)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.

□ 먼저 **김민영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**이 **'국가보훈 참전유공자 보상정책 현황'** 에 대해 설명한다.

○ 이어서 **임완섭 연구위원**(한국보건사회연구원)이 **'참전유공자 보상현황 및 실태'** 에 대해 설명하고, **김윤태 교수**(고려대 공공사회학과)가 **'참전유공자 보훈정책 제도 정비방안'** 에 대해 발제한다.

○ **충청남도 경로보훈과 유성일 팀장**이 **'지자체 참전수당 지역 격차 해소 사례'** 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**국민 참전유공자, 지자체 보훈담당자** 등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해 **자유발언**하는 시간도 마련된다.

□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,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,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보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.

□ 황의균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은 "참전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적 예우를 다하는 '일류보훈'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"라고 말했다.

□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"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**참전유공자 분들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**은 **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**이다"라며, "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개선방안들이 **조속히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,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**"고 말했다.

□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(포럼)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,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.

※ 정책제안과 정책반영 결과는 「온국민소통」 누리집 (www.sotong.go.kr)에서 확인 가능

담당 부서	혁신조직국 정보공개과	책임자	과 장	조아라 (044-205-2403)
		담당자	사무관	이승희 (044-205-2425)
담당 부서	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민영 (044-202-5650)
		담당자	사무관	조건희 (044-202-5411)

모두의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('23.1.27)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제43차 정책소통포럼 개최 계획(안)

□ 행사개요

○ 일시/장소: 2023. 9. 7.(목) 15:00~16:30/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

○ 주제: **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?** (지자체 참전 수당 중심으로)

○ 참석: 전문가(2인)*, 관계부처(국가보훈부, 지자체)**, 자유발언 참여자

* 임완섭 연구위원(한국보건사회연구원), 김윤태 교수(고려대 공공사회학과)

**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, 충청남도 경로보훈과

□ 선정배경

○ 참전유공자 지자체 참전수당관련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

○ 지역별 참전수당 격차 해소 등 수당의 형평성 제고·개선방안 논의 필요

□ 본포럼 진행(안)

○ 진행방식: 전문가 정책제언(발표) 및 질의응답·토론

- 1부(15:00~16:30): 발제 및 자유발언, 채팅토론 등 온·오프라인 진행
- 2부(16:00~17:30): 현장간담회(10명 내외) 및 소그룹토론 진행

시간계획	세부계획	비고
15:00~15:10	■ **개회 및 일정 안내 / 주제 소개**	사회자
15:10~15:20	■ **제도 소개** (국가보훈 참전유공자 보상정책 현황)	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
15:20~15:50	■ **전문가 발제 1** • 참전유공자 보상현황 및 실태(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) ■ **전문가 발제 2** • 참전유공자 보훈정책 제도 정비방안(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 교수) ■ **전문가 발제 3** • 지자체 참전수당 지역별 격차해소 사례(충청남도 경로보훈과 유성일 팀장)	전문가 2인, 지자체 1인
15:50~16:05	■ **자유발언(4명)** • 참전유공자 2인, 지자체 보훈담당자 2인 발언	참전유공자, 지자체 4명
16:05~16:20	■ **질의응답** (발제자, 관계부처 등 답변)	보훈부, 지자체
16:20~16:30	■ 사후토론, 제44차 포럼 안내 및 마무리	사회자

붙임2 제43차 정책소통포럼 참가신청 QR 코드

제43차 정책소통포럼 참가신청 QR코드

붙임3 제43차 정책소통포럼 참여 이벤트